<별첨>

정책질의서

각 해당 문항에 대해 1), 2)중 하나를 선택하여 ( ) 기입해주시고 그 구체적인 이유나 의견을 자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각종 여론조사상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에 대한 이유로 가장 큰 것은 정치인의 부정부패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독자적인 [부패방지법]을 마련하여 국회에 청원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단체들이 청원한 [부패방지법]의 원안대로 <내부자고발>를 철저히 보호하는 법안으로 부패방지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2) 부패방지법의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내부고발자보호> 문제는 신중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 )

* 구체적인 사유는 ? <반부패기본법>제정을 통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 <내부자고발 보호제도> 및 <시민감시청구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온국민이 강력히 바라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건설을 앞당기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 주님들과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민원부서의 지역 담당관데 폐지를 검포, 추진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 뇌물수수와 조직폭력범죄 등 반사회적 각종 범범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 국토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서해안의 간척사업은 경기도의 시화호 오염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갯벌 보전의 여론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새만금 간척사업은 많은 반대의견과 제 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귀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1) 새만금간척사업은 즉시 중지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국민의 여론을 모아 계획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 새만금간척사업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계속진행되어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생택적 가치가 매우 높은 '갯벌'에 대한 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갯벌을 비롯한 모든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보전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 끊임없는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구촌 가족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대의적 명제인 환경보전과 더불어 끊임없는 개발존리가 작용해 문명적 이기(利器)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은 철저리 인간에게 맞춰졌다는 것도 부인알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로인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할 자연 생태계의 무분별한 파괴와 이로 인한 부작용이 결국엔 우리 인간의생활까지 위협받도록 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의 인간적 생활 및 문명적 혜택을 누리기 위한 모든 개발논리는 환경친화적 요소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3.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많은 논의와 실천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은 매우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귀하께서는 지구당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직선거 출마자 내천, 공천에서 여성후보의 비율을 30%이상 보장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실적으로 인물의 부족과 지구당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 지방자치선거에서는 각종 의원의 내천, 공천에서 여성후보를 30%이상 공천하겠습니다.(○)
2) 인물의 부족과 지구당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여성후보의 30% 이상 공천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 여서의 사회참여 확대등 지금까지 반복되는 거창한 상투적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기 보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고 접근하고 싶습니다.

즉, 지구상에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50대 50이라는 간단한 비료와 더불어 한 가정, 가족, 단체, 사회, 지역,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여성과 남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종 공직선거에서 여성 유권자의 영향력은 남성 유권자보다 오히려 크다는 점입니다. 여성표가 당락을 좌우하고, 여성운동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선거 출마자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만 끝나면 이들 여성들에 대한 배려는 사실상 인색했던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지방자치선거는 물론 모든 공직선거에서 여성후보 30% 이상 공천이라는 전네조건을 붙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여성후보들이 출마해 남성후보들과 당당히 겨루는 정치풍토가 하루빨리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여성후보들도 기존 정당에 의존해서 공천을 받거나 전국구 및 비례대표 진출을 노리기보다는 스스로 홀로서기를 통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점도 아울러 강종하고 싶습니다.

4. 우리나라는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평균 45.9시간, 세계8위)과 세계최고수준의 산업재해들, 그리고 대량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IMF이후 장기실업자의 증가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노동시간의 단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노동시간의 단축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저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을 세계어느 노동자들과 비교해도 그 능역이나 근명성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열이 높다는 점과 인내와 끈기를 바탕으로 한 근면, 성실한 점을 이미 세계 각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인 것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전환되면서 빛의 속도만큼이나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인터넷

운영능력 습득등 자기능력 개발 등을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더 쉽게 애기하자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결코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어진 시간에 자신이 해야할 일을 더욱 악착같이 끝맺음 하겠다는 '일 욕심'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산업현장 및 경제환경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한 자기능력 개발 및 충분한 휴식 제공을 통해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과의 경쟁에서도 앞서 갈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영세 중소 제조업체를 위한 활성화 대책 및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와 재교육을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5. 우리는 오랜 군사정권하에서 인권침해국,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권신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 인권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 설치를 두고 정부는 법인적 성격의 민간기구로, 인권단체들은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여야 한다고 하며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 정부의 인권법안에 따라 설치되는 인권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을 갖추지 못한 법무부의 산하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상의 국가적 인권침해가 가능한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독립적 국가기구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야합니다.(○)

2) 인권위원회는 기존 국가기관의 인권보장기능에 허점이 있는 부분, 즉 '틈새'를 보충하기 위한기구이며 인권보장에 관한 제1차적·최종적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고, 이를 감시·보충하는 책임만 인권위원회에 있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민간감시를 할 인권위원회를 민간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저는 98년부터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오고 있는 관계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남다를 수 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그나마 국민의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더욱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해 인권법안을 마련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합니다.
문제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민간특수법인 이냐, 완전한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느냐에 따른 논란인데 양쪽 모두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안대로 만간특수법인으로 하자는 데 대한 반대입장은 사법권의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 행사에 따른 불신에서 비롯괴고 있다는 점에서는 법조인의 한 삶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야 말로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과거 군사정권하에서부터 절대권력에 의해 사법권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권력의 시녀'라는 국민적 지탄과 불신을 받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사법권의 독립성과 실절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면 인권위원회를 민간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국민정서상 이를 납득시키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우리보다 훨씬 앞서 마련한 세계 선진국가들의 사례에 비춰볼 때도 인권보호와 관련 국가기관을 포함한 인권침해에 대한 성역없는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구의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6.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고교입시제도 변화에 대한 지역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지역은 고교입시 비평준화지역이 많은 곳입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경기도내 고교 입시 평준화지역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합니다.(○)
2) 반대합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경기도내 고교입시 평준화 요구는 특히 교육개혁 부천시민연대, 교육공동체 안양 시민연대, 군포새교육공동체, 전교조 경지지부등 수도권 5개 신도시 학무모단체들로부터 적극적으로 개진돼 셩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01학년도 고교입시부터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들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기위한 용역의뢰와 여론수렴 작업등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교입시 평준화화는 고교입시에서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부모가 숙제를 대신해 주는 등 입시 교육에 매달린 나머지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를위해서는 도내 지역별 교육시설 여건을 비롯, 설문조사 및 공천회 개최를 통한 여론수렴, 학군설정, 신입생 배정방안 등 고교입시 평준화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대다수가 원하는 추첨전형(평준화)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7.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의 경우 심의기구로 되어 있는 반면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심의기구가 바람직합니다.( )
2) 자문기구가 바람직합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교육자치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산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공립하교와 같이 학교운영위가 심의 기구로 되어 있지 않고 자문기구로되어 있어 실질적 권한이 없는 기구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립학교가 특정 재단 중심으로 운영된는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공립학교이건 사립학교이건 간에 오늘날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실추되어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그에따른 그에 따른 자녀들의 향학열 또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가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며 높은 경쟁결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뵈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각종 부장용도 돌출됐지만 긍정적 효과가 더 컸다는 점 역시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높은 교육열과 향학열을 뒤받침해줄만한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바라보는 교육제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이에 따른 입시위주의 교육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공-사립학교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든, 자문기구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자치 발전의 교권이 실추되고, 이에 환멸을 느낀 유능한 교직자들이 교단을 스스로 떠나게끔 만들어서는 안되는 건강한 교육자치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학부모-교사-학교를 연결하는 열린 여론수렴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하교에 보낼 수 있는 여론수렴기구로 정착될 수 잇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사 및 학교 입장에서는 하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들로부터 간섭과 감사를 받고 규제받는 기구가 아닌 지역 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학생과 주민(학부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안내하는 가장 든든한 지원기구라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이든 자문기구든 간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교육자치를 앞당기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 국민들은 이번 여야 공천과정이 지구당내에서의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고 보스중심의 밀실, 정실공천으로 귀결되었다며 공천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만약 당선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의 후보공천자(추천자)를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지구당내의 경선(예비선거를 포함한)을 통해 선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합니다.(○)
2) 반대합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오늘날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총선시민연대를 비롯한 국민적 목소리는 바로 이같은 우리나라 여야 정당의 당내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도 비롯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선거에 있어서 후보공천자를 당원들의 뜻을 수렴하는경선을 통해 선정하는 당내 민주주의 정착은 우리나라 정치가 선진정치로 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공정한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여야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 스스로가 지역연고주의에 의한 정당구조는 물론 보스중심, 계파중심의 정치풍토 등을 청산하는 문제와 깨끗하고 참신한 정치신인이 공정한 룰에 의해 대의원들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특히 저는 정치신은으로서,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정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당내 민주주의에 의한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절차를 통해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정될 경우 오히려 곧바로 선거에 돌입하는 정치신인들의 낮은 인지도 극복 및 지구당내 결속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 할 것입니다.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한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르되 외국군대가 주둔한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협정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한미간의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 현재 SOFA는 미군범죄의 수사권, 기지 사용료 부담, 환경권등의 거의 모든 조항에서 불평등한 협정이므로 곧바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2) 분단현실에서 한미간의 공조협력체계가 필요하므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 )

* 구체적인 사유는 ? 잘 아시다시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으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이 SOFA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과 '휴전선 고엽제 살포'등 미군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속속등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측에서 한국의 어느 곳이든지 요구만 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6조에 명시된 '전국8천5백여 만평(자산가치 12조6천억원)의 땅을 무상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에세 한국

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인천신공항에 무상임대를 요구한 것도 이같은 조항에 의한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요구만 하면 한국측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 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민항기가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 활주로를 사용하면 그 사용료를 낸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문제일 것입니다. 즉, 미군이 우리 땅을 공짜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ㅇ르 사용하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SOFA협정에 대한 불이익이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킨 것은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의 한국직업여성 살해사건 등 일 것입니다.
이러한 SOFA의 불평등은 주한미군의 독점적 권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명문화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등에서 이것에 대해 국가의 자주권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생존권까지 유린하고 잇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SOFA 협상이 95년 시작돼 97년 아무런 결과을 내지 못한 채 미군측에서 중단선연을 한 뒤 3년만에 SOFA협상이 제기됐으나 지난 91년 한차례의 협정을 통해 몇 개의 문구가 수정된 것 이외에는 32년전 체결된 협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인권 유린 방지를 포함한 보다 전향적인 한미주둔군지원협정에 대한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10. 국가보안법은 규정 내용의 불명확성과 부적정성에 의해 광범위하게 남용되어 왔고 수사과정에서도 고문 등 인권침해행위로 인해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법의 개정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당연히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합니다.(○)
2) 우리나라의 특수한 분단현실을 볼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국가보안법을 선(先)개정, 후(後) 폐지하는 것 수준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이유인 즉슨, 동서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전쟁도발 위협이 상존하는 특수한 분단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9번0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맞물려서 저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견고히 유지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유지는 물론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의 단계적, 점진적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 화해,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통일정책에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11. 현 지방자치법(99년 8월 31일 개정)은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결과물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1994년에 도입된 주민투표제는 명목상 조항으로만 남아있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법화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연되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제도는 주민투표의 발의여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이며 주민투표의 결과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문적 주민의견 조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참여에 의한 행정의 민주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투표제가 실현되도록 구체적인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제가 주민투표제에 대해 화고한 찬성의지를 밝히는 것은 현제 우리당 소속 원혜영 부천시장도 지역의 주요 시안에 대한 주민투표제 실시를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해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을 뿐만아니라, 중동신도시 아파트자치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공동체 협성 및 부당한 재산세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과정에서 절실히 느낀 것은 보다 광범위한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정하고도 합법적인 절차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안에 직접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직접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반쪽자치'라른 날을 듣고 있는 자방자치제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의 계기를 자연스럽게 마련해 주는 한편 입버화된 주민투표제 의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까닭에 지방자치단체당도 재량에 의해 번북할 수 없어 경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하는 책

임을 지원준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12. 현재 총선시민연대에서는 지난 2월 9일 통과된 개정된 선거법이 87조의 부분 개정을 통해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의 선거참여운동을 가로막고 유권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디고 판단합니다. 현재 총선시민연대에서는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가로막는 선거법 58조, 254조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사실상 현행 선거법은 상당히 제한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2) 현행 선거법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참여를 보장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저는 정치신인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현행 선거법이 정치신인들에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 지를 실제 발견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역의원에겐 유리하고, 정치신인에겐 부리하도록 돼 있는 개정선거법의 문제 조항은 정치 신인으 경우 16일간의 선거운동일 이전에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있는 반면, 현역의원의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로 무제한의 의정활동보고회를 통해 표밭갈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치 신인은 선거사무실에 자신의 이름도 내것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100m 달기기를 하면서 현역의원만 50m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역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아니면 무슨 일을 해도 사전선거운동으로 걸리게 돼 있는 현행 선거법은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자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많은 정치신은들은 현역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법에 손발이 묶이고, 돈과 연줄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쳐 시작부터 좌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정선거버의 문제조항으로 인해 정치 신인이 기성 청치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겨뤄 유권자들에게 진가를 충분히 알일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 한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 수준의 향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핮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단체으 선거개입을 가로막는 선거법 58조, 254조의 재개정 요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행 선거버이 안고 있는 모순은 시급히 개정, 일반유권자들의 후보자에 해한 알권리 침해는 물론 깨끗하고 전문서을 갖춘 정치신인들의 국회진출을 통한 정치개혁을 여망하는 국민적 요구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위현소기자 있는 개정선거법으 법률적 검토를 통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13.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7%, 전체수입곡물의 10% 이상이 유전자 조작품종으로 추정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유전자 조작식품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는 일차적으로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 표시제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떠나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서는 표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2)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에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실시해도 늦지 않습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7%, 전체 수입곡물의 10% 이상이 유전자 조작품종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전자 조작식품이 사람과 환경에 a;치는 영향 및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자신이 먹는 수입식품에 관한 인체의 유-무 여부에 대해 사정에 충분히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표시제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4. 올해 초 프로야구선수협의회가 구성되어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사이에 선수협의회를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있습니다. 입후보예정자는 프로야구선수협의

회의 결성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1) 프로야구선수협의회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며 프로야구 구단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
2) 현재 프로야구 구단들의 재정상태나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일부 선수들의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구성은 성급한 일입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따라서 저는 프로야구를 이끄는 구단들의 재정상태가 다소 편차는 있지만 구단 소속 선수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구성된 선수협의회는 이제 막 프로스포츠의 꽃을 피워가는 국내 스포츠발전을 위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수협의회가 구단 재정상태와는 무관하게 시즌 종료후 연봉협상 등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등의 압력단체로 실력행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로야구선수협의회는 그동안 프로야구 발전에 기여해 온 야구선수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구단측의 책임도 있는 만큼 프로야구 발전과 국내 프로스포츠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할 '통과의례'라는 점에서 구단 및 선수협의회에 참여한 선수 모두가 향후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는 것이 프로야구 팬들에게 더욱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5. 귀하가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입법활동과정에서 당론과 개인적 의견이 배치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1) 개인의 소신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2) 당론에 따르겠습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그 이유는 15대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당론에 따라 거수기 역할을 하는 바람에 자신을 찍어준 지역구 유권자들과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회 진출후 입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론과 개인적 소신에 배치되는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선택의 카드를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뽑아준 지역구 유권자들을 직접 여론을 수렴하고 더 나아가서

는 정치신인으로서 각종 정책입안 및 결정과 관련해서 현재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고 여론조사르 실시, 그 결과를 갖고 당에 직겁 입장을 표명한 뒤 소신껏 선택할 생각입니다.

16. 마지막으로 귀하는 경기도내의 가장 큰 현안 내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또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종합하여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경기도내의 가장 큰 현안 또는 무제점은 수도 서울과 둘러샇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지역적 불균형과 서울 중심의 생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파생되는 교통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 등과 각종 도시기반시설 부족현상이라고 봅니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각종 군사시설은 물론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에 대한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 부분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을 둘러싸고 31개 시-군이 자리잡고 있는 까닭에 저마다의 독특한 향토문화는 자리잡고 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문화적 혜택에 대한 불균형 현상도 매우 심한 것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측히 각 시-군별로 지역경제를 이끌 특화된 육성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부분도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 예방하는 방안으로 반드시 검토되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경기도내와 관련된 미쳐 언급하지 못한 현안사항 및 문제점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안고 있는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이 수도 서울과 관련된 사항이 라는 점에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과 함께 긴밀한 협력하에 모든 문제를 풍어가야 한다는 점에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의체 기구 설립을 통해 사안별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내 문제는 경기도민 스스로가 해결한다는 도민의식과 돼 31개 시-군이 함께 협력해 각종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기도내의 현안 문제 및 문제점을 해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